

연구총서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 춘 흠

통 일 연 구 원

#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평화체제의 개념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기 언급된 분석 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나아가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고자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중국은 1990년대 초에 발생한 독일의 통일실현과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유럽지역에서 지속되어 온 미·소 냉전체제는 와해되었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정치 질서를 일방적으로 주도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냉전적 태세를 존속시켜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미 테러사태 발생을 계기로 미·러 협력 관계 진전으로 국제차원의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미국이 군사력을 위주로 일방적으로 국제사무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차원의 냉전적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은 코소보 사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 등에서 군사력 위주의 해결 모색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제질서까지도 점차 불안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견제 전략,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 강화, 북한과의 불화, 대대만 군사협력 강화 등에서 구체화됨으로써 지역적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대북한 전략을 위해 자국주도로 한·미·일 대북 정책 협의를 더욱 확대하고 있

어 미·북간 냉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테러진압 작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있다고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국제적, 지역적 냉전요소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여 왔는가? 국제적으로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공조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축출하기 위해 단독으로 미국에 대해 군사적 대결구도를 감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은 우선 자체적으로 핵실험을 재개하고 전략핵 미사일 구축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2001년 7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좋게 작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촉구하고 있다.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상당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폭 감축되어 주둔하게 할 경우 중국은 완전한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보유 표명 시사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외교적 해결 주장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대북 유

엔사철안이 유엔에 상정될 경우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피면서 비토권을 발휘하기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기권하여 미국의 입장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북 관계 진전 없이는 미·북 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촉구해 왔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 중국은 남북한간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중·미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군사협력과 지원 수준은 크게 확대되지 않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의혹, 생화학무기, 장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개발문제에 있어 중국의 태도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소극적인 대응만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전협정 유효를 지지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에 대한 협의에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이를 4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미국, 중국이 체결하는 평화협정보다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냉전적 인식의 존재나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전략개념의 하나인 북한완충론,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방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차등적인 외교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북한이 중국 안보의 완충지(buffer zone) 역할을 지속하도록 대한

반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완충론은 어느 정도 냉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내 일부 전략가들은 향후 중국은 미국을 자국 안보의 주적(主敵)으로, 그리고 미·일 방위체제하에 있는 일본을 부상하는 적(敵)으로 간주하여야만 하며 통일이한국이 실현되면 미국이 북한 지역을 대중국 군사적 전진기지로 전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지원 방식이 인도주의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냉전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점이다. 중·북간 정치관계가 원만치 못한 기간에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되어 온 기간이 있었다. 정치관계가 소원해졌는데도 경제지원을 지속해 온 데는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돕는다는 인도적 차원의 기본 목적도 있었지만 북한정권 유지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대남 관계도 소원케 하였다. 중국이 대북 정치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경제 및 군사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대중 협상력만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남북한 관계 역시 별 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방식에 근거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이 늦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 차원의 탈냉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3가지 수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국제체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패권적 일방주의로 냉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대만 무기 판매 확대, 대북 강경 태세가 아시아의 냉전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남북한 관계는 미국의 대북 강경 태

도로 인해 불안정감은 있으나 남북간 냉전 구도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중국은 간주하였다. 중국은 미국주도의 국제체제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등 호혜적인 신국제질서 구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억제하고 자국의 핵전략 및 군사력을 증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 정전협정 유지를 지지하고 대북 안보 공약을 축소하고, 한·미 동맹을 용인하면서 만일에 있을 북한의 대남 선제 도발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4자회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한반도 문제가 남북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토록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협의와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가 냉각되면 될수록 그리고 남북간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리고 중·미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될수록 4자회담이 더욱 필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중 양국이 4자회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시기이다. 이런 요구에 북한과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 폐기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극히 적으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반



대한 것은 긍정적인 역할이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노력, 즉 북한 핵의혹, 장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 금지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은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 안보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국이 북한과 1961년에 맺은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는 점은 부정적이라 할 수 없으나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요구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또는 미국과 협력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중국의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면에 머물고 있는 데는 국내적 차원인 중국의 북한완충론, 중국의 정치관계 발전 없는 대북 경제지원 정책, 내정불간섭,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 주장이라는 원론적인 면을 지닌 전략이나 정책을 지속한 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완충론은 중·미 관계가 증진되면 될수록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북한완충론의 전략적 중요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미국과의 대결국면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문제로 인해 미국과 공조하여 자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D계획 참여 권유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문제로 인해 만일 한국이 미국의 MD계획에 참여할 경우, 대만 참여도 가시화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북한위협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로 경제적 요인이 중국경제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더욱 주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지속케 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 지원과 군사지원을 더욱 가중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설적인 영향력을 중국이 행사함으로써 대북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중국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이 중국의 대북 안보공약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구소련 붕괴시기부터 김일성의 사후에까지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경원시 하는 등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한 바 있으며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완충론보다는 한반도 안정 유지가 자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이롭다는 점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간 중국정부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천명해 온 점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표명은 21세기에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대북 안보 조약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북한완충론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미국에 크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혹이 불식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미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지도부는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안보이익이 크게 상충되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 이전이라도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욱 편향되는 것을 원하며 특히 통일한국이 친중국(親中國)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기를 원할 것이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고 한·미 방위조약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1세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북한을 완충지로 지속시키는 한, 중·미간의 장기적인 안보이익 갈등과 북한의 위협을 의식한 한국의 대미 외교는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원하는 자주 중립적인 한반도가 출현되기 위해서는 한·중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목 차

I. 서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	1
II. 국제적 차원에 대한 중국의 입장 .....	3
III. 지역적 차원에 대한 중국의 입장 .....	8
1. 중·미 관계 .....	8
2. 미·일, 한·미, 미·북 관계 .....	12
가. 미·일 관계와 대만 .....	12
나.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 문제 .....	14
다. 미·북 관계 .....	20
3. 남북 관계와 정전협정 .....	27
가. 남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	27
나. 정전협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	37
VI. 중국의 국내적 차원 .....	50
V. 결어: 중국의 역할-분석 결과와 전망 .....	55

참고문헌

## I. 서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가 긴요하며 특히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건설적이며 중재자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의 중심 축이 유럽에 치중되고 있어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추진능력이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약하기 때문이다.

북한핵 의혹 사건이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이해가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과정(peace process)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이 사안에 따라 4자회담 참여자인 한국, 북한 또는 미국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평화체제의 개념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기 언급된 분석 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나아가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고자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과정을 거쳐서 수립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평화과정이란 1950년대 미국과 구소련(舊蘇聯)이 구축하였던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

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체제나 냉전구조가 해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상에서의 체제의 형성과 구축은 오랜 기간 동안 대외정치환경, 국제경제상황, 사회, 문화, 이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서로의 요소들을 지탱해주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존속해서 유지되어 온 체제를 의미한다.

한반도는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아직도 냉전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체제는 1950년 한국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체제로서 이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세 가지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틀에서 분석될 수 있다. 즉 한반도 냉전체제는 3가지 체제적이며 구조적인(systemic and structural) 수준에서 해체 작업이 상호 연계되어서 추진됨으로써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3가지 체제라 함은 국제적 체제, 지역적 체제, 국내적 체제에서 발견되고 지속되는 냉전의 의식, 인식과 이를 근거로 추진된 전략과 정책으로 인해 형성되고 확립된 체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3체제를 본 연구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이란 입장에서 응용해 보면, 국제적 차원은 냉전체제의 근간이 되어 왔던 미·소간의 세계차원의 냉전체제를 의미한다. 현재 구소련의 붕괴로 미·러가 형성하는 국제적 냉전체제는 해체되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국제적 사무에 대해 행하고 있는 냉전의식이나 냉전전략의 존속을 의미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은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미·중·일·러와 남북한 상호간에 표출되고 있는 냉전적 요인을 의미하며, 국내적 차원이라 함은 중국 국내정치에서 표출될 수 있는 냉전적 인식, 전략, 의사결정 방식, 정책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중국이 상기 3가지 체제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고 또 대응해 왔으며 중국의 태세와 반응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국제적 차원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일찍이 미국과 구소련이 194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초강대국으로 등장, 양국이 국제정치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구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산권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미·소 양대 진영이 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국안보와 체제유지를 위해 소련 진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중국은 구소련과의 이념(구소련의 미국과의 평화공존 천명)과 안보전략상의 갈등(구소련의 대중국 핵개발 지원 거부) 등으로 인해 제3의 길을 택하여 비동맹권의 주축이 되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제3의 길 전략은 1970년대 미국의 대중국 외교관계 수립과 대중 전략적 협력관계 추진 등으로 크게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중·미 전략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초에 발생한 독일의 통일실현과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유럽지역에서 지속되어 온 미·소 냉전체제가 와해되었으며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중·미 갈등으로 중·미 전략적 협력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고 중국은 판단하였다. 중국은 특히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정치 질서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냉전적 태세를 존속시켜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정치체제에서의 미국의 냉전적 태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코소보 사태에 직접적인 무력개입 후부터는 미국의 외교 행태가 신국제주의(新國際主義)<sup>1)</sup>를 확립하면서 냉전적 태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러한 미국의 태세는 점차적으로 중국의 안보이해를 크게 훼손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sup>2)</sup>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인 NATO군대가 1999년 유엔안보리 상임위(UNSC)의 결의안을 무시한 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유고연방을 폭격한 점을 주시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향후 미국이 소수민족 및 인종 분류, 난민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군사적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군사개입 정책은 부시 미 행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이라크에 대해서도 공중 폭격을 서둘러 결정하는 등 군사적 해결전략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2001년 9월 미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냉전적 태세와 전략 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9월 미 테러사태이후 미국의 대테러 군사활동을 위한 외교가 신속히 전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軍)이 나토조약 제5조에 의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토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러시아와 함께 2001년 11월 워싱턴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표명하여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테러 작전에 대한 협력과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issile Defense Program, MD)을 묵인하는 대가로 러시아와 함께 향후 전

- 
- 1) 沈國放 유엔주재 중국부대표는 제54차 유엔총회 제1차 회의에서 미국주도의 TMD계획과 ABM 조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언급하고 냉전적 사고는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권주의 강권주의인 신국가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세계는 더욱 불안정하다고 언급하였다. “Shen Guofang on Building New Security Concept,” *FBIS-CHI-1999-1014*.
  - 2) 중국은 「政治報告」를 통해 덩소평이 제창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행동지침으로 표방하고 특히 경제개혁의 비약적 발전, 정치개혁의 추진, 정신문명 건설의 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人民日報」, 1997. 9. 18~20.



략핵 탄두를 약 2/3 수준으로 감축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러시아의 반테러 지원에 대한 협력대가로 러시아 부채 37억 달러를 탕감해 주는 등 양국관계를 급속히 개선해 나갔다. 미국의 대러 동반자적 협력 관계 약속은 2002년 5월경부터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약 3,000개의 전략핵을 보유한 미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전략핵탄두를 1,700~2,200개로 감축하는 『전략공격감축조약』에 서명하였다.<sup>3)</sup> 또한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대화”와 “경제관계 발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협력 즉 최혜국대우 부여, 러시아의 WTO 조기 가입 지원, 러시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을 약속함으로써 미·러 경제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2002년 5월 미·러가 핵탄두감축조약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은 미·러의 핵탄두 감축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상호 평등 호혜적인 입장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개념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함으로써<sup>4)</sup> 내심으로 미국의 대러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테러사건 해결에 있어 러시아와의 핵감축 조약 서명, 나토군을 직접 동원한 점과 비록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나토에 러시아가 참여하도록 수용한 점으로 보아 미·러 간 국제적 냉전체제는 와해되었으며 미·러간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sup>5)</sup>

3) 미국은 전략공격 감축조약으로 명명한 데 비해 러시아는 전략공격 잠재력 감축조약으로 명명키로 양해함으로써 이 조약이 미·러 공격형 전략 무기를 어느 정도 감축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주장한 탄두 제거에 대한 사찰과 완전 파괴, 전달체인 ICBM, SLBM과 폭격기에 장착할 핵탄두 규모 등을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4) “Title: AFP: PRC Foreign Ministry Releases Statement on NATO-Russia Accord,” *FBIS-CHI-2002-0530*.

다시 말하면, 중국은 미·러 협력관계로 국제차원의 냉전체제는 해체 되었으나, 미국이 군사력을 위주로 일방적으로 국제사무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차원의 냉전적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코소보 사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 등에서 군사력 위주의 해결 모색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제질서까지도 점차 불안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미사 일방억제계획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군사집단 확대 및 동맹 강화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는 더욱 현저히 가시화 됨으로써 미 테러사태 이후 국제정치 체제는 더욱 불안정하고 냉전적 요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국제적 냉전요소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여 왔는가? 미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하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정책을 펼칠 것임을 언급한 점으로<sup>5)</sup> 보아 미국의 태세에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전략은 삼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미·러 간의 화해로 러시아로부터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공조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5) Chen Zhi, "What's True and False About the Word," Xinhua, 2002. 5. 28; "Title: Beijing: NATO, Russian 'True Partnership' Discussed," *FBIS-CHI-2002-0528*.

6) 중국 외교부장 唐家璇은 2002년 3월 6일 제9차 전국인민대회 제5회의에서 국제적인 세력균형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9·11 테러사태 역시 세계질서와 국제형세에 있어서 경제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정치는 평화와 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축출하기 위해 단독으로 미국에 대해 군사적 대결구도를 감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 Ⅲ. 지역적 차원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지역적 차원의 냉전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데는 미국이 세계차원의 문제를 군사력에 호소하려는 전략추구가 동아시아지역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경제 전략,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 강화, 북한과의 불화, 대대만 군사협력 강화 등에서 구체화됨으로써 지역적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대북한 전략을 위해 자국주도로 한·미·일 대북 정책 협의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미·북간 냉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테러진압 작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있다고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남한과 클린턴 전(前)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냉전체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일 관계와 대만문제,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 문제, 미·북 관계, 남북한 관계와 정전협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미 관계

중국은 무엇보다 부시 미 행정부가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에 맺은 중·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해체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해<sup>7)</sup> 미국의

7) 중국 지도부의 비난은 2000년 중순부터 시작되면서 특히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해졌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대테러 군사작전으

MD계획<sup>8)</sup>이 우선 순위에서 탈락되기는 했으나,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은 MD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아시아 여러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MD 계획이 단순히 대북 군사 견제용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봉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9)</sup>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구실로 MD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며 MD계획은 실제로 일본, 한국, 대만을 연계한 방위체제로 자국의 군사력 견제를 목표로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sup>10)</sup>

다시 말하면 중국은 미국의 MD 계획 및 TMD 계획은 중국 포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sup>11)</sup>

---

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주춤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테러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두 차례의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으로 미사일계획이 더욱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1년 12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탈퇴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8) 미국은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 20기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통해 약 5기 정도의 전략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계획하고 있다. Wade L. Huntly and Robert Brown, "Missile Defense & China," *Foreign Policy in Focus*, Vol. 6. No. 3, 2001. 1.

9) 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2000년 7월 27일 제7차 ASEAN Regional Forum에서 아·태 지역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MD가 지역 안보의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치분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全人大常務委員長) 역시 현 국제정세가 결코 평화와 번영이라고 단정할 수만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 『人民日報』, 1998. 7. 28.

중국은 미국이 MD를 통해 향후 군사력 우위를 더욱 확보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중국의 전략미사일 균형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만과 일본 등의 참여로 대만해협 상에 200기 이상 배치하고 있는 중국의 대대만 미사일 공격능력을 전략적으로 봉쇄한다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sup>12)</sup>

미국의 MD와 TMD 연계 구축 노력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가? 중국은 우선 자체적으로 핵실험을 재개하고 전략핵 미사일 구축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으며<sup>13)</sup>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2001년 7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MD계획 저지를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추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D계획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MD 구축을 위해 러시아에게 ABM(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조약을 폐기할 것임을 표명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은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여 ABM조약 폐기를 반대하였다. 이에

---

11) “Title: Xinhua ‘News Analysis’: U.S., Russia Fail To Strike Deal On Missile Defense,” *FBIS-CHI-2001-1115*.

12)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joint international seminar by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5. 27, p. 8; John Newhouse, “The Missile Defense Debate,” *Foreign Affairs*, Vol. 80, No. 4, pp. 97~109.

13) Brad Roberts,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 Montaperto,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pp. 53~63. 중국은 1999년 10월 전략핵 무기의 2차 공격 능력을 제고키 위해 약 97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정된 바 있다.

대해 러시아는 처음에는 미국의 MD 구축이 미·러간 공격형 핵무기의 균형을 불안정케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바 있었다.<sup>14)</sup> 그러나 미 테러사태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ABM조약 폐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미·러간 전략핵 감축을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MD 계획을 사실상 묵인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변화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사실상 반MD에 참여하였던 러시아는 미국의 MD를 수용한 것이다. ABM조약 폐기 전인 2002년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 가이드라인」(National Security Guidelines)에서 기존의 전략 미사일 감축과 동시에 핵무기 사용 범위 확대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 표명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MD추진은 20~100기 정도의 요격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MD의 요격 미사일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단기간 미국의 MD가 미·러간 전략균형을 훼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sup>15)</sup>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14)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국가안보 가이드라인」(National Security Guidelines) 서명으로(2000. 2) 기존의 전략 미사일의 수를 감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20~100기 정도의 요격미사일에 의한 제한적인 미국의 MD 능력이 당장은 미·러간 전략균형을 훼손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Jonathan Schell, "The Folly of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ume 79, No. 5, September/October 2000, p. 26; 윤덕민, "미국의 NMD 구상과 한반도" (한국정치학회, 2001. 4. 20), p. 4.

15) 윤덕민, "미국의 NMD 구상과 한반도," p. 4.

## 2. 미·일, 한·미, 미·북 관계

### 가. 미·일 관계와 대만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을 확대 개정하고, 나아가 미국이 대대만 무기판매를 확대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등을 주장하고 나서는 일련의 조치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동맹 강화 전략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은 특히 미국과 일본 양국이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주도의 소 NATO화” 구축 기도이며 역내 군사동맹 강화라고 우려하였다.<sup>16)</sup> 향후 중국은 자국의 대대만 위협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행동 참여가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7)</sup>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대만의 방어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구실로 대만에 대해 군사무기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대대만 위협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를 지속하여 왔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무기판매는 확대되고 있다. 1995~96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미사일 위협을 가한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증대되었으며 현재 대만에 PAC-2P형 (Patriot Advanced Capability, PAC) 반미사일체계가 실전 배치되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제 AA-12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등 무기 구매로 대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

16) 중국은 미국의 TMD 계획을 ‘Asian version of NATO’ 라고 비난하고 있다. *FBIS-CHI-2000-0229*.

17) 『中國時報』, 1998. 5. 26.



대만 AIM-120 미사일 판매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8)</sup> 대만은 현재 미국이 개발중인 PAC-3에 관심을 표명하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상 전구 광역 탄도미사일(Navy Theater Wide Ballistic Missile)의 도입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국무기 구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만이 미국의 최신형 미사일 구입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TMD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고 표명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TMD에 포함될 경우, 대만해협 상에서 200기 이상 배치하고 있는 자국의 대대만 미사일 공격 위협 능력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sup>19)</sup> 대만의 TMD 참여는 대만에 취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나 강제적 위협수단이 무력화됨으로써 심리전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중국 군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의 TMD참여 모색 의도는 군사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서 미국과 정치적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TMD 참여가 실현될 경우, 그 동안 자제되어 왔던 미·대만 군사협력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클린턴<sup>20)</sup>과 부시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 판매를 지속적으로 내정간섭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히 비난하였는 바, 이는 무기 획득으로 인해 대만 내에서 대만독립 주장을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양안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8) The Associated Press, Audra Ang, "China Vague On Missile Test Reports," Beijing, 2002. 2. 7.

19)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 8; John Newhouse, "The Missile Defense Debate," pp. 97~109.

20) *FBIS-CHI-2000-413*.

부시 미 행정부는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와 같이 대만에 장거리 레이더, 구축함을 판매하였으나 중국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여 4대의 Aegis 구축함 판매는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 테러사태 이후 미 의회는 4대의 키티급 구축함 판매와 대만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부시 행정부에 요청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sup>21)</sup>

현재 중국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이 중·대만간의 무력사태시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군대가 주둔할 경우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방법을 통한 무력통일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 오고 있으나 대만이나 대만을 지원하는 국가가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정책, 미·일 동맹 강화, 미국의 대대만 정책은 중국봉쇄라는 전략구도로 동아시아 지역적 냉전체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나.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 문제

탈냉전이후 1990년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거와 같이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

---

21) 미 상원은 2003년도 정부 각 부처 위임권 심사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이 4대의 키티급 구축함을 대만에 판매토록 요청하는 등 무기 판매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미 하원 역시 미·대만간 고위급 군인사 교류와 합동 군사훈련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미 행정부에 요청하였다. “China Condemns US Congressional Acts on Military Cooperation With Taiwan,” *Xinhua*, 2002. 5. 13; “Title: PRC Condemns Congressional Acts Showing ‘Strengthening US-Taiwan Military Cooperation’,” *FBIS-CHI-2002-0513*.

았으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당시 중국이 주한미군 존재를 용인하는 첫째 이유는 중국이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문제라는 인식과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가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데 있었다.<sup>22)</sup>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의 대미 위협인식만을 더욱 증폭시켜 한반도 안정 유지에 이롭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주된 대상으로 남·북한 협력 확대와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을 지적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미·북 관계개선을 지지하여 왔다. 즉 중국은 주한미군 존재에 대해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존재가 한반도 평화과정에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주한미군의 급진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북한의 대미 위협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훈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존재를 용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한미군이 미·일 안보동맹의 확대나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할 경우, 북한의 무모한 대남 국지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중국의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원치 않는 시기에 북한이 자국과 사전협의 없는 무모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 미국 및 일본과 적대적인 무력 대결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 시점에서 제2의 한반도

---

22) Chu Shulong, "China and US-Korean Alliance,"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 10. 28~29.

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주도로 통일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sup>23)</sup>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남북한, 미국, 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일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한국전이후 북한은 주한미군이 6개월 이내에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970년대에는 평화협정 체결이후 철수가능으로 변하였다. 1980년대 후반(1987년)에는 단계적·점진적인 철수를, 1990년대 초반에는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다가, 1992년부터는 통일 전까지 철수의사 표명 후, 통일 이후에는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다가,<sup>24)</sup> 1998년에는 ‘7년간 단계적 철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sup>25)</sup> 이 처럼 북한의 입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나 남북 평화협정 체결시 이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한·미 방위조약 폐기 명문화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6)</sup>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3) Andrew Wedeman, “Prospects for a Sino-American Transition War,”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 79.

24) 홍용표,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29.

25) 『조선중앙통신』, 1998. 6. 27.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북한」, 대변인 성명; 1991년 당시 김용순-Kartman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26) Leon V. Sigal, “Beyond the Agreed Framework to a Missile Deal,”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p. 17.

한·미 양국은 북한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및 지위 문제는 한·미간의 협의 사항임으로 주한미군 존재문제가 북·미 외교 정상화와 남북간 평화협정체결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조건인 북한의 재래식무기 감축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북한의 기본 입장이다.<sup>27)</sup> 다시 말하면 북한은 주한미군이 거론되지 않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자체를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나,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상은 한·미 양국이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만을 암시하였다.<sup>28)</sup> 북한의 입장과 한국정부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상에 대한 소극적인 대북 촉구로 인해 남한 내에서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

27) 중국은 주한미군 존재에 대해 북한과 다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중국은 주한미군 존재가 한반도 평화과정에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급진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훈련 축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존재를 용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한미군이 미·일 안보 동맹의 확대나 일본의 독자적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있다.

28) 파월 미국무장관은 북한핵 조기 사찰, 검증 가능한 미사일 억제, 재래식 감축 등 3대 의제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2001. 7. 27),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재래식 무기 감축이 남북한과 미국이 협상해야 되는 의제임을 암시하였다.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남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달라 서로의 일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2001년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그 동안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긴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에도 『중·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 북한간에 대미 태세에 대해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29)</sup>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면서도,<sup>30)</sup> 입장이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자국이 구태여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상당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

---

29) 중국은 2000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때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원치 않고 있어 북한과는 불편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러·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간에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0) 남북한 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기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용인하였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사전에 중국과 충분한 입장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국당국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James A. Kelly, "North-South Relations after the Summit," CSIS-KINU Seoul Workshop, 2000. 11. 16, p. 9.

하지 않는 이유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로 남북한 정치관계가 발전되면 될수록 주한미군의 대북 군사력 견제 명분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 전환을 주장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 실현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중국의 『解放軍報』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이 점점 부적절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함으로써<sup>31)</sup>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중국의 한 학자는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32)</sup>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폭 감축되어 주둔할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전한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주 관심사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일미군의 감축이 예상되며, 주일미군의 감축에 따라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군사력 확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더욱 우려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중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좋게 작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후에는 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통일 후에는 주한

31) 『解放軍報』, 2000. 7. 10.

32) Shiping Tang, “A Neutral Reunified Korea: A Chinese View,”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Fall/Winter, 1999, p. 466.

미군이 한·중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고<sup>33)</sup> 통일이전처럼 남쪽에 주둔하는 것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미·북 관계

중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봉쇄전략은 중국과 구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전략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1950년 한국전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 이후부터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87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로 인해 미·북 양국 간 모순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클린턴 미 행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 특히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방북이후 대북 대화와 접촉을 증대함으로써 미·북 냉전 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1999년 9월, 50년간 지속되어 온 대북 경제제재 완화 결정과 조명록 북한특사의 방미시(2000. 10) 양국간 적대관계 종식 표명을 미·북간 역사적인 진전으로 해석하면서 크게 지지하였다. 중국은 미·북 공동성명으로 양국간 긴장이 완화되어 양국관계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북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입장과 양국이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미국은 또한

33) Quansheng Zhao, "The Chinese Position on the Korea Four-Party Talk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p. 25.



대북 식량 및 의약품을 위시한 경제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남북한간의 대화와 화해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할 것과 북한과 미국이 미군병사 유해 색출에 공조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교환과 경제협력과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과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sup>34)</sup>

중국의 낙관적 전망과 지지가 더욱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중·미 관계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지정하는 등 발전하였던 시기였으며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 회담으로 인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이 더욱 실현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중국은 중·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북 관계가 완전히 원만해 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자국의 협력과 남·북 관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북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서 중국은 미·북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진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3월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에 미·북 관계가 냉각해 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 측에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이 2001년 6월 6일 북한과의 협상재개를 선언하면서 제네바 핵합의 이행개선, 북한 미사일계획에 대한 검증 및 미사일 수출금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전방으로부터의 철수 등을 협상의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해

34) 『人民日報』, 2000. 10. 14.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한 군사적 결탁책동”이라고 강력히 한미 양국을 비난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전방으로부터의 철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이 먼저 철수하고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 양국간에 협의할 사항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sup>35)</sup>

이러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법에 중국은 불만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가 양국간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음을 표방한 클린턴 미 행정부가 북한과 맺은 「북·미 연합성명」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간헐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아울러 중국은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있어 미국과 북한이 성실히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과거 핵 문제는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현안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핵무기·미사일·재래식 군비태세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미 대화재개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중국이 평가하는 성의 있는 조치란 미국의 대북 포괄적 관계 개선을 의미하며 우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외교적 협상을 의미한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는 미국의 반테러 전략과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등 세계차원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 미·북 관계 개선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가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일간 연계정책을 클린턴 행정부 때

---

35) 「평양방송」, 2001. 4. 17; 「로동신문」, 2001. 4. 16, 8. 8.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김정일의 방한이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2001년 8월 8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환경 조성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화조건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진전에 큰 흥미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보다 더욱 강조하여 향후 한국 혹은 일본이 미국과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없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간의 공조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남북한 관계 개선에 이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북한이 순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고 향후 미·북 관계가 원만치 못할 것이며 양국간 외교관계 실현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중·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북한이 2002년 10월 핵개발 시사 표명 이전에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핵위협론은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 위협을 조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며 일본 역시 미국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 핵의혹 제거에 대한 이견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의혹 해소는 관련 당사국간의 외교적 대화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2002년 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시 중국이 외교적 해결을 피력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중국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었다.<sup>36)</sup> 이로써 북한핵 의혹 해소방법에 대해 중

---

36) 2002년 미·중 북경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있어 투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민들을 굶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표명하면서도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화재개를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강택민 주

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미 테러사태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북한 핵의혹 주장에 대해<sup>37)</sup> IAEA는 북한이 현재 영변 핵시설 동결과 임시 사찰팀의 주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더욱 큰 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 핵 포기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북한이 신고한 모든 핵물질만을 검증하는 데도 3~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

북한의 핵보유 표명 시사이후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외교적 해결 주장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江澤民 중국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2002년 12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경 회담에서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양측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측에 촉

---

석은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나 미국의 대북 강경태도는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동시에 표명한 바 있다.

- 37)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의혹에 대한 북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 연방정보부는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미 1개의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금년내에 IAEA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한 경수로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2002년 2월 13일 하원에서 증언한 바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3월 북한이 미·북간 제네바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회에 증언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 완공은 크게 지연되어 2003년 목표에서 201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낙쉬 박사는 전망하고 있다.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April 5, 2002.

구하였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여 온 것이다. 중국은 북한핵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에서 러시아와 함께 미·북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중국이 미·북 제네바 핵합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의 사회적 안정이 흔들려 더 많은 탈북자가 중국에 유입되는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sup>38)</sup>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미국이 유엔 결의안에 만족하지 않고 대북 강경 군사적 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39)</sup>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대북 유엔사찰안이 유엔에 상정될 경우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피면서 비토권을 발휘하기 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기권하여 미국의 입장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만약 중국이 비토권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미·일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묵인토록 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의혹이 가시지 않는 한, 중국이 지지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의혹은 불식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40)</sup>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

38) *Financial Times*, 2002. 12. 3.

39) 중국과 러시아는 2002년 12월 북경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이라크 사찰 유엔 결의안에 만족하지 않고 이라크에 대해 일방적인 군사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유엔 결의안에 입각한 철저한 사찰을 통해 이라크의 무장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0) 2002년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는 지금까지 핵보유 국가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국의 핵전략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

국은 유엔의 대북 군사행동을 억제할 명분이 없음을 북한측에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은 2003년 하반기부터 IAEA의 사찰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 태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권고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1)</sup>

상기와 같은 중국의 입장 표명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존재를 원하지 않는 주변국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한반도 평화과정이 더욱 순조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에게 IAEA의 요구를 수용토록 권유하는 데 중국이 실패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모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에서 핵보유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과시해 온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다.

---

로 미국이 향후 재래식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남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이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선제 핵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는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2년 3월 6일 북한 외무부를 통해 미·북 제네바협정까지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 41)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및 관련 물자와 기술 수출관리 제도조례」와 「관리제도목록」을 발표, 미사일 관련 민감한 물자와 기술의 수출입관리 방법을 한층 더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 조례와 목록은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비확산 정책에 따라 중국정부가 채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및 관련 물자와 기술 수출관리제도 조례」 관련 孔泉 외교부 대변인 담화, 「人民日報」, 2002. 8. 26.

### 3. 남북 관계와 정전협정

#### 가. 남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남북 관계 진전 없이는 미·북 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촉구해 왔다. 중국은 2000년 6월 남북간 최고 지도자간의 대화로 남북관계가 이전 보다 안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간 경제교류가 증대되고 군사적 충돌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예측 못할 군사적 도발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해 왔으나,<sup>42)</sup> 남북 정상회담이후 양국간 정치적 긴장감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2000년 8월 22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이 향후 대남 대미 관계발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반해 중국 「人民日報」는 군사훈련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하여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노력을 더욱 지지하였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검증 요구와 미국의 반테러 우선 전략으로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의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북 대화재개를 더욱 촉구하여 왔다. 2002년 2월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江澤民 주석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 후 중국 외교부는 2002년 3월 13일 백남순 북한 외무장관의 방중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권유할

42) 陸信源, “動蕩孕育調整 複雜因素增多: 1998年國際形勢回顧,”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1999國際形勢」(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7. 11), p. 20.

43) 「人民日報」, 2000. 8. 23.

것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다.<sup>44)</sup>

한편, 한국정부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임동원-김용순 회담에서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 합의(개성공단 건설 등),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후 남한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주적론”을 이유로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를 서명을 연기해 왔다. 임특사의 방북에서 남한은 식량 30만 톤과 비료 20만 톤을 지원하는 약속의 일환으로 북한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약속한 것이 돋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동원-김용순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합의가 표명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남북간 정치 군사적 인식과 해결방법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중국 역시 남북간에 정치적 군사적 불신이 너무 크게 때문에 획기적인 남북한 평화구축안이 산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특사의 방북 이후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에 응답하듯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재개되고 북한의 아리랑 축전이 거행됨으로써 2002년 4월말부터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되었다. 임특사는 방북시 개성공단 사업추진을 재확인하였으나 이후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아 개성공단 건설 등 정부간 경제협력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전력 10만kw와 하루 공급량 가스 12만 톤과 전화 2000회선 가설 등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

44) Agence France-Press,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in Beijing for Talk.” 2002. 3. 14.



있으며 시설 공사에만 필요한 경비는 약 9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sup>45)</sup> 이 같이 남한은 대북 경제 협력을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간 정치적 화해를 추구하였으나 북한의 성의 있는 실천이 없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국은 처음에는 임특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남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데 대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치문제로 간주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가 쉽게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개성공단 추진에 대해 남한을 불신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임특사의 방북은 긍정적인 성과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특사도 빠른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며 남·북한 및 미·북간이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관계를 개선하길 바라는 바라고 표명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으며, 북한의 미국과 일본 등 기타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sup>46)</sup> 등 남북관계가 미·북, 일·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중국은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한국이 미국의 대북 강경 태세를 완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의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47)</sup> 중국은 임특사의 방북으

45) 『朝鮮日報』, 2002. 7. 27.

46)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표성명, 2002. 4. 9

47) 『人民日報』, 2002. 4. 9.

로 남북간 대화협조 가능성이 제고됨과<sup>48)</sup> 동시에 미국의 대북 강경 태세에 대항하는 남북간에 자주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는 성공치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남북한이 공히 미국의 태도를 비난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과거의 대결구도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sup>49)</sup>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는 많이 해소될 것이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긴장완화 조치가 크게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북, 일·북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중국은 2002년 9월 17일 예정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북한과 일본은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인근국으로서, 중국은 북·일 관계 개선 및 관계 정상화 실현을 지지하며, 금번 방문이 북·일간 전쟁 후 남아 있는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sup>50)</sup>

2002년 6월 발생한 서해 교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 한국내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한국정부는 서해 교전을 일으킨 북한측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당국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5일 김령성 북한 조평통위원장의 명의로 이번 서해사건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규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를 제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8월 초에 금강산에서

48) Tao Bingwei,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from a Chinese Perspective,”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wo Years of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FES and the 5th Anniversary of the SNS, Kyungnam University, May 23~24, 2002.

49) Ibid.,

50) 『人民日報』, 2002. 8. 31.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김령성의 대남 사과에 대해 남한 정부는 사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의 한나라당은 김령성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며 정부가 너무 선거를 의식해 북한의 입장을 서둘러 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남한 정부는 북한의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면서 남북한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금강산에서 있었다. 남북한 실무 접촉팀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 이행을 약속하는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8월 12일 장관급회담과 8월 15일 북측 민족통일행사 대표단 방문, 9월 중순 상암경기장과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체육경기,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장관급회담과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실현 등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4개월 전 임동원 특사가 방북하였을 때 발표되었던 2002년 4월 5일 공동 보도문을 이행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합의이다.

중국은 왜 북한이 남측 요구를 수용하였는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 대화 재개에 대해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도 한국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북한이 간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이 식량난 해소와 새로운 경제조치 이행에 있어 남측으로부터 식량 및 비료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달러 수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중국은 북한이 대남 개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sup>51)</sup>

북한의 전술적 입장 변화는 2002년 8월 6일 북한과 유엔사령부 장성급회담에서<sup>52)</sup> 표명되었는 바, 양측은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방지와 긴장완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북한과 유엔사령부에 표출됨으로써 남북한과 유엔사령부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는 않았다. 이찬복 북한 장군은 “해상충돌 발생원인은 명확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유엔사령부와 북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 장군은 “NLL협이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남북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왜 중국은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입장은 어떠한가? 북한은 남북한 군축 안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

---

51) 북한은 서해교전으로 인해 미국이 미북 대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19일부터 선덕~양양 직항로를 이용, 경수로 건설관계자들을 남한에 파견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서해사태이후 진전되는 남북관계에 맞춰 북한의 경수로 착공에 특사를 파견하여 경수로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할 것임을 나타내었다. 미·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으나 핵사찰 수용 시기 및 미사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요구 조건인 북한이 IAEA의 핵사찰 일정에 응해야만 기본적으로 미·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데 있다. 앞으로 3년 안에 새로운 원자로가 작동하기 전에 북한은 모든 핵 원자로와 실험실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며, 1994년 이전에 생산된 플루토늄이 얼마나 되는 지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New York Times*, “Decoding North Korea,” editorial, 2002. 8. 8.

52) 『연합통신』, 2002. 7. 3; “U.N. Command Proposes General-Level Talks with North Korea,” *FBIS-EAS-2002-0703*.

결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는 1990년에 제안된 것으로 군사훈련과 연습제한, 무력감축 합의 후 3~4년 내 3단계 병력감축, 정규 무력 감축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 군사 조직과 민간 무력의 해체를 골자로 하는 병력 중심의 감축에 비중을 두었다.<sup>53)</sup> 반면, 한국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군사 당국간 직통 전화 설치, 주요 군사훈련 상호 통보, 군 인사 상호교류 등 3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실현되기를 북한에 요구하고 4자회담 정례화를 제시하여 왔다.<sup>54)</sup>

1990~92년 8차에 걸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신뢰구축에 관한 5개 항이 합의된 바 있으나, 북한의 군축 제안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위기로 인해 남북한간 군축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① 대규모 군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제 문제, ②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③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④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⑤ 검증문제 등이 있었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5)</sup>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한 북한과 남한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국은 남북한간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

53) 유석렬, “남북한 군비통제의 배경, 특징, 전략,” 신정현 외 공저,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pp. 210~213.

54)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방안” (21세기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9. 12. 7), p. 46.

55)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36~139.

으로 남북한간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나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이 지지하는 이유는 CBM이 없이는 남북한 군비경쟁을 억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적 CBM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CBM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간의 정치적 CBM 수준으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56)</sup>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과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한, 남북간의 정치적 CBM이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구태여 신뢰구축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신뢰구축안을 사전에 억제할 명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신뢰구축안을 남북한 신뢰구축을 훼손하려는 내정간섭으로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자안보기구를 통한 남북간의 군축과 군비통제 실시 효율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 기구에 의한 남북간 군축이 실현될 경우, 자국의 대북 군사 지원을 통한 영향력 및 통제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한의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56) 남북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기본적인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점이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6월 남북한 평양 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며 만약 주한미군이 평화 유지 역할에 국한한다면 미군 주둔을 수용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8월 4일 김정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표명한 적이 있었다. 남북 정상간에 묵시적이거나 용인된 주한미군 존재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셈이다. 『大公報』, 2001, 8. 20. *FBIS-CHI-2001-0820*.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지 않은 남북한 신뢰구축 합의사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중국의 안보이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다.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국이 거부할 만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사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sup>57)</sup> 또한 중국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간 신뢰구축이 급진전될 경우 기존의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불안해 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신뢰구축 방안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미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군사협력과 지원 수준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증대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대북 군사무기 지원 수준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의혹, 생화학무기, 장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남북한 군사적 균형과 감축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무기의 폐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입장을 전진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이 실현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

57)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남북간 군사적 직통전화 설치, 양국간 군인사 접촉의 정례화 및 교환, 정전협정 준수, 비무장지역의 평화적 이용,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관람 등이다. Changhee Nam and Bonhak Koo,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nd the Inter-Korean Security Relations,"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nd Germany's Ostpolitik for Peace and Security,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제45차 학술회의, 2001. 5. 17, pp. 14~15.

을 축소시킨다는 면에서 중국의 안보에 크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으로서는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이 실현되면 될수록 자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위협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해 남북한 신뢰구축에 더욱 매진하는 데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시 미 행정부가 남북한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한간 재래식 무기 감축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과 북한이 우선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군사력 감축보다는 남북한군의 후방으로의 배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대미 외교관계 수립이 없는 한 전진배치 구도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을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한 정치적 신뢰가 크게 증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군사력 감축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단행할 경우 북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이 이를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4자회담 4차 본 회담 분과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5대 협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관련국간의 대화와 협의로 긴장 완화를 주장하였다. 중국의 5대 협상원칙은 첫째,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향한 협력이 광범위하게 증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의 구축 및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당사국간 관계증진이 지지되어야 하며, 여타 국가들은 물론 북·미 관계의 점진적 정상화가 환영받아야 하며, 셋째, 당사국은 군사분야에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위해 협력해야 되며, 넷째, 당사국은 잠재적 군사



적 분쟁을 막기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섯째, 당사국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돌발적인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sup>58)</sup> 중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논리는 군사적 조치 외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개선이 실현되고 북·미, 북·일 외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남북한간의 군사적 불신과 적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나. 정전협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이 1953년에 체결되었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법적·제도적인 “정전 상태속의 평화”가 한반도에 지속되는 데 합의하였다. 정전협정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5조)에서 재확인되었는 바, 합의서에서 남한과 북한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상태 구축 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는 입장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데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남한은 4자회담을 표방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관련국인 미·중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3월 유

---

58) 『연합통신』, 1999. 1. 23; “China: PRC Outlines 5 Principles To Reduce Tension in Koreas,” *FBIS-CHI-99-022*.

엔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남한 장군을 임명한 이후 군정위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여 정전협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sup>59)</sup>

북한의 정전협정 훼손 기도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게 미·북 양자간 판문점 군사회의를 제안함으로써 미·북 장성급 회담이 몇 차례 성사되었으나 1995년 9월에 중단되었다. 미·북 장성급 회담 중단을 빌미로 북한은 1996년 2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중간 단계로 「북·미 잠정협정」 체결과 「북·미 공동 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등<sup>60)</sup> 미·북간 직접적인 군사협상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왜 북한이 집요하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가? 문제는 미국이 군정위 본회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유엔사령

59)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훼손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정위 본회의 중단: 북한은 1991년 3월 UNC가 UNC측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에 남한 장군(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남한 장군이 UNC를 대표할 수 없다하여 군정위 본회의를 중단시켰다. 둘째,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북한은 MAC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4년 4월 28일 북한과 중국의 판문점 군사정전위대표단 철수와 중립국감시국 철수: 북한은 자국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1994년 12월 15일 북한의 요구에 의해 중국이 자국 판문점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넷째,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중립국 감시위원국인 체코(1993. 4)와 폴란드 대표단(1995. 12)도 북한지역을 떠남으로써 정전위 활동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1995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에서 정찰활동 증가와 김일성 사망이후 휴전선 인근 전방기지에 170mm 자주포를 300여문에서 500여문으로, 240mm 방사포를 140여문에서 280여문으로 각각 증강 배치하여 기습공격 능력을 향상시킨 점 등이다. 『世界日報』, 1996. 12. 6.

60) 북한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6. 2. 22.

부 장군이 참석하지 않은 채, 북한과 직접 군사회담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북한과의 직접회담 제안이후 북한은 사실상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군사회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묵인함으로써 유엔사-북한군 회담 즉 정전회담의 중요성이 많이 상실되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과 북한의 계속되는 정전협정 훼손 노력을 불식시킨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4자회담 제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sup>61)</sup>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사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북한은 1999년부터는 평화협정 논의를 4자회담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sup>62)</sup>

북한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 자국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중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담이 더 이상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 스스로가 대표단을 철수시켰는가? 아니면, 당시 중국은 1994년 북한 핵의혹으로 인해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대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하였는가? 혹은 당시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관계가 아주 나쁜 시기로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북한과의 정치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하였는가? 아니면, 중국이 북한의 대미 직접 평화협정 주장에 대한 불만으로 자국이 더 이상 정전협정을 준수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수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61) 이헌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4~6.

62) 1999년 6월 21일 주창준 주중국 북한대사는 서해교전 당시 북한이 거론한 북방 한계선 문제(북방 5개 도시는 북한의 영토라는 주장)를 미·북간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 있는 일이다. *FBIS-EAS-1999-0623*.

대답은 자국대표단을 철수한 이후의 중국의 입장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훼손 기도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북한과는 다른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남한의 정전협정의 유효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특히 평화협정 체결국에 대한 입장과 4자 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간의 교전은 사실상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서해 교전은 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사건은 북한이 시작한 것으로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해군의 한국 해군 경비정 선제 공격은 북한 지도부의 명백한 사전 의사 결정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서해교전을 주도한 주된 이유는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려는 데 있었다.<sup>63)</sup> 북한 외무부는 2002년 7월 1일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유령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그간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설정은 정전협정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해교전을 통해 정전협정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북한이 사과하는 대상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유엔사령부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사령부는 해

63) "DPRK Urges US, ROK To 'Immediately Withdraw' NLL Or Face Consequences," *FBIS-EAS-2002-0803*; 『로동신문』, 2002. 8. 3.

체되어야 한다는 입장과<sup>64)</sup> 정전협정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사과의 대상을 한국의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번 서해교전은 북한의 정전협정<sup>65)</sup>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NLL을 파기할 목적으로 교전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은 NLL을 훼손하려고 시도하여 왔으며 북한이 교전을 전개한 시점은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 특사로 방북하기로 확정된 직후에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해 오고 있는 협상 의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NLL문제를 거론키 위해 서해교전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도 나온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 요구인 북한 핵<sup>66)</sup> 및 미사일 개발과 수출 금지와 재래식무기 감축 등에

64) 「조선중앙방송」, 2002. 7. 24; “DPRK FM Spokesman on Need to Dismantle UNC for US Forces’ Withdrawal, Settlement of Korean Issue,” *FBIS-EAS-2002-0724*.

65)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이 1953년에 체결되었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법적·제도적인 “정전 상태속의 평화”가 한반도에 지속되는 데 합의하였다. 정전협정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5조)에서 재확인되었는 바, 합의서에서 남한과 북한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상태 구축 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는 입장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데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남한은 4자회담을 표방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관련국인 미·중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남한 장군을 임명한 이후 군정위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여 정전협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66)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대해 북한 나름대로 자신의 의제를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서해 상에서 교전을 개시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교착된 미·북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초 한·미 양국 정상은 서울회담에서 대북 전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명한 점과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교전으로 인해 미국이 대북 협상을 서두르게 되면, 북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서해교전 도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간단하였다. 중국은 이 같은 서해교전은 남북한간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반도 관련 각측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하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반도 남·북 양측이 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하고 향후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언급하는<sup>67)</sup>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서해교전 도발을 소극적이거나 반대한 것이다.

#### (1)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규정과 이에 입각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자<sup>68)</sup>, 남북간의 전쟁이 종

*Issue Brief for Congress*, April 5, 2002.

67) 중국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2002. 7. 9.

68)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보복을 지켜 본 북한의 안보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인 1991년 12월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불가

식된 것으로 보고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미 외교관계 수립시 미·북 평화협정이 동시에 체결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평화문제 논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첫째,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며, 둘째, 한국과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에 대한 협의에 중국도 참여자이고 한국도 참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 접근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한 것이다.<sup>69)</sup> 1996년 4월 沈國放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현재의 정전협정에 대체될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은 아니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국이며, 중국 역시 서명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하

---

침조약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수용하였으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 핵 사찰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한 정치적 관계는 악화되고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69) 중국은 정전협정이 1953년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한 당사자로 하고 유엔군을 또 다른 당사자로 하여 공식적으로 조인되었으며,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전협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도 정전협정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이 합의한 선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Chou Xingbao,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hina," 통일원 정세분석실, 1996. 5, p. 6.

여 한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의 관련국임을 분명히 하였다.<sup>70)</sup> 또한 황장엽 망명 사건이후 개최된 1997년 5월 한·중 외무장관 북경회의에서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남북 당사국간에 의견이 일치되면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4자회담에 참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북한의 대미 정전협정 폐기 협상 논리를 반박하였다.

중국이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데는 중공군이 1950년 당시 한국군과 싸운 것이기보다는 16개국 유엔회원국들과의 전쟁이었기에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시 한·중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미·북 수교시 미·북 평화협정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중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한·중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제 2항에 의하면, 양국은 상호불가침과 지속적인 선린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합의한다고 표명하였다.<sup>71)</sup> 중국은 1950년 한국전이 전쟁선포 없이 발발되었으며 중국 역시 당시 한국과의 전쟁상태에 개입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을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여 미·북 외교관계 수립시 한·중 수교와 같은 맥락의

70) 『人民日報』, 1996. 4. 16, 4. 18. 소치형,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발표 논문, 1999. 11. 26), pp. 7~8. 재인용.

71) 공동성명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조항으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이를 4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미국, 중국이 체결하는 평화협정보다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2)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 축소 지향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노력에 대해 중국은 대북 안보 공약 수준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1997년 3월 중국은 향후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한 중·북 우호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것임을 처음으로 밝혀 북한의 군사적 선제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唐家璇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국제적 상황 및 남북한 유엔 가입 등으로 인해 중·북 우호조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 이제는 친선의 의미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중·북 동맹조약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음을 밝힌 것이다.<sup>72)</sup>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대북한 안보 공약을 크게 감소하였음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대남 선제 공격행위에 대한 한·미간의 공격이 있을 경우, 중국이 북한을 자동 지원하여야 할 아무런 부담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위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한·미 연합군이 대북 무력 제재를 감행할 경우, 중국은 한·미 연합군의 무력 대응을 정전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억제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72) 『동아일보』, 1997. 3. 21.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최근의 중국의 입장에서 알 수 있다. 미·북 제네바 핵합의이후 발생한 1996년 10월 북한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중국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에 동의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문제로 인해 안보리 의장의 대북 경고성명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sup>73)</sup> 상기의 중국의 강력한 입장은 1994년 12월 중국이 정전위 군사 대표단을 철수시킨 이후에 나온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1996년의 중국의 입장변화는 1993년 5월 북한 핵문제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북 제재 경고 결의안 채택에 대해 중국이 기권하고 의장성명 발표까지도 단호히 반대한 때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중국이 북한의 정전협정 훼손 노력 중 대남 무력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한·미의 군사공격에 대응할 명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은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를 긍정적으로 지지한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 축소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 공약과 수준에 대해 중·북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 중국 측의 공식적인 수정이 표명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다. 중국측의 공식적인 수정으로 인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더욱 준수하게 될 것이고 4자회담에 북한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4자회담

정전위 회담이 속개되지 않음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6년 4월 16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

73) *Korea Herald*, 1996. 10. 18.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공동 제의하였다. 4자회담은 6·25전쟁의 주 당사자인 남북한이 합의하고 관련국인 미·중이 함께 지지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한·미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8개월간 반대해오다가 1997년 초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1997년 11월 제3차 예비회담에서 4자회담 의제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라는 단일 의제로 할 것과 제1차 회담을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2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국·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협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10월에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긴장완화분과위원회」와 「평화체제구축분과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었고, 1999년 1월에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는 이들 2개 분과위원회를 처음으로 가동시켜 「분과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각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9년 4월 제5차 회담과 8월 제6차 회담에서 2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4자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기존의 요구인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4자회담의 당면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를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4자회담이 지연되고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로는 첫째, 의제 상정 자체가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보다는 우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표출하여 한국이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 자체에 흥미가 없었다.<sup>74)</sup> 둘째, 한·미 양국이 4자회담에의 중국의 참여를 공표한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을 너무 의식하여 북한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김일성 사후에도 원만하지 않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치중함으로써 북한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역시 대북 직접 교섭과 협력관계 구축에 너무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한은 북한과의 협력확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북의 4자회담 참여를 적극 촉구하지 않았다. 넷째, 미국 역시 북한의 핵투명성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한 대북 협상에만 더욱 치중하였으며 미 테러사태 이후에는 미국의 반테러 최우선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국간 정치적 협상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sup>75)</sup>

4자회담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열의가 없는 점으로 보아 향후 남북한이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단기간 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폐기를 중국이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으며 6자회담을 반대한 점으로 보아<sup>76)</sup> 4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74) *FBIS-CHI-1999-0608*.

75) 한국과 중국은 4자회담 실현을 원하면서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미 테러사태 최우선 해결 입장으로 인해 4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있는 한·미, 중·미, 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76) 1998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4자회담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과도기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거나 용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은 4자회담에서 정진협정 폐기가 서명되고 유엔사령부 해체라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을 한·미 양국이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인 주한미군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이며 중국 역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중국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언급하여 4자회담을 선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었으며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4자회담 선호는 2000년 7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6자회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확인되었다.

## VI. 중국의 국내적 차원

중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냉전적 인식의 존재나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전략개념의 하나인 북한완충론,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방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차등적인 외교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개념 중에 북한이 중국 안보의 완충지(buffer zone) 역할을 지속하도록 대한반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기는 하나 체제붕괴를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내 일부 대미 강경주의자들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지속되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체제나 국가 붕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내 일부 전략가들은 향후 중국은 미국을 자국 안보의 주적으로, 그리고 미·일 방위체제하에 있는 일본을 부상하는 적으로 간주하여야만 하며 통일이후가 실현되면 미국이 북한 지역을 대중국 군사적 전진기지로 전환할 것을 예상할 것이다. 이들의 예상은 상기의 강경주의자들의 주장인 대량의 탈북자들의 중국내 유입, 동북3성의 경제적 혼란과 중국내 민심 소요, 이로 인한 북한의 체제 또는 국가붕괴 가능성, 통일이후의 등장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중국·북한 국경 부근 배치 실현이라는 가상적이고도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와 쉽게 결합됨으로써 “북한완충론”이 고수되는 정책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표출은 한반도 평화과정 이행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추진되게 하는 것이다. 중국 현 지도부는 북한의 체제 붕괴나 국가 와해가 현실화될 경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구원치 못한 데(lost North Korea) 대한 중국내 강경 보수

주의자들의 강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한완충론 유지 전략이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대북 지원 방식이 인도주의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냉전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점이다. 중·북간 정치관계가 원만치 못한 기간에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되어 온 기간이 있었다. 정치관계가 소원해졌는데도 경제지원을 지속해 온 데는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돕는다는 인도적 차원의 기본 목적도 있었지만 북한정권 유지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대남 관계도 소원케 하였다. 구소련 붕괴이후 김일성의 사후까지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북한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비난하는 등 중국과의 정치 관계를 소원케 하였으며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치중하였다.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이 뜻대로 되지 않자, 김영남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의 정치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다. 만일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이 원만해졌다면 북한은 중국을 더욱 배제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996년 초 중국은 북한과 정치적 관계 복원 및 안보유대를 재개한 적이 있었으나, 북한의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 김정일은 1995년 6월 노동신문 기고에서 중국의 경제자유화 과정이 북한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sup>77)</sup> 펴으로써 중국과의 정치관계 복원에 쐈기를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6년 3월 북한과 고위급 군 인사 방문외교와 대북 군사무기 수출규모를 전년대비 약 2.5배로(약 350만 달러 규모) 확대하였다.<sup>78)</sup> 1996년 7월 부총리 급인 羅幹 중국국무원 비

77) 김정일은 사회주의 혁명의 배반자들이 사회주의 이상을 왜곡한 결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는 등 변질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을 지칭하지 않고서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비난하였다.

서실장이 35주년 「중·북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체결 기념행사 일환으로 방북하였으며 중국 북해함대 소속 두 척의 함정도 같은 시기에 남포항을 처음으로 방문한 바 있었으나,<sup>79)</sup> 중·북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이 중·미간 갈등고조 속에서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입장 때문이었다.<sup>80)</sup>

문제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난 심화가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해가 된다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온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이로운 것인가를 알아보자. 한반도 평화과정에 이롭게 작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중국이 대북 정치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대중 협상력만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남북한 관계 역시 별 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북 양국간 정치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1990년대를 보냈다면 2000년대는 정치관계 진전에 따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의 효율성이 요구되었다. 김정일의 두 번에 걸친 방중과 강택민 주석의 방북은 중·북 양국간 정치관계가 복원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기간 남북간 정상회담도 실현되었다. 이같이 중·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원만해지는 상태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실현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과정체제 구축에 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78) *Korea Herald*, 1996. 12. 12.

79) 『朝鮮日報』, 1996. 7. 22.

80) 김정일은 등소평씨 사망에 따른 조전(弔電)에서 등을 평가하기를 “등소평 동지가 조·중 우위를 위해 행한 공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일성 사망시 중국이 “비활데 없이 침통한 심정으로 마음속 가장 깊은 애도와 가장 정성 어린 위문을 전한다”라고 언급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김정일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과 대한민국 수교정책 등으로 인한 중국의 처사에 소원한 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977. 2. 2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방식에 근거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이 늦어지는 점이 있었다. 중국의 북한완충론은 미국의 대북 접근이나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중국의 견해는 너무 가상적인 면을 설정한 것이다. 우선 한국정부가 상기와 같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대북 군사위협에 동조하거나 협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제2의 한국전 발발을 원치 않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조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북한의 군사적 투명성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주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 증대로 인한 한반도 불안요인을 해소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내정불간섭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면이 없지 않다. 북한핵과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핵을 거부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북한 핵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로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곤 했다.<sup>81)</sup>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긍정적이긴 하나 너무나

81) 1998년 11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방일 직전 아사히 신문과의 인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어 아직까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IAEA의 북한핵 사찰 요구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 중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군비통제나 군비축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부터 실현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과 “관련 당사국간의 협상문제”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군비확장 가능성(미·일 신안보조약,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 확립 등)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용인하는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냉전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중국이 북한을 남한보다 더욱 우대하는 것 역시 한반도 평화과정에 이롭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남북한에 파견하고 있는 중국대사의 등급의 차이와 여러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정치관계 발전에 따른 한·중 군사협력이 저조한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중·한 관계가 포괄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때에는 북한의 대남 협력 노력은 약화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터뷰에서 1998년 8월의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는 각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자위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을 빌미로 미국과 T7W 공동 연구개발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과 대만이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자위범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9. 2. 3.

## V. 결어: 중국의 역할-분석 결과와 전망

본 연구는 세계 차원의 탈냉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3가지 수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국제체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패권적 일방주의로 냉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안보 협력 강화, 대대만 무기 판매 확대, 대북 강경 태세를 아시아의 냉전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남북한 관계는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로 인해 불안정감은 있으나 남북간 냉전 구도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중국은 간주하였다. 중국은 미국주도의 국제체제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등 호혜적인 신국제질서 구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억제하고 자국의 핵전략 및 군사력을 증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 정전협정 유지를 지지하고 대북 안보 공약을 축소하고, 한·미 동맹을 용인하면서 만일에 있을 북한의 대남 선제 도발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4자회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한반도 문제가 남북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토록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협의와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가 냉각되면 될수록 그리고 남북간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리고 중·미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될수록 4자회담이 더욱 필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야말로 한·중 양국이 4자회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시기이다. 이런 요구에 북한과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 폐기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극히 적으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 것은 긍정적인 역할이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노력, 즉 북한 핵의혹, 장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 금지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은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 안보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국이 북한과 1961년에 맺은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는 점은 부정적이라 할 수 없으나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요구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또는 미국과 협력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중국의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면에 머물고 있는 데는 국내적 차원인 중국의 북한완충론, 중국의 정치관계 발전 없는 대북 경제지원 정책, 내정불간섭,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 주장이라는 원론적인 면을 지닌 전략이나 정책을 지속한 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완충론은 중·미 관계가 증진되면 될수록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북한완충론의 전략적 중요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미국과의 대결구면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

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문제로 인해 미국과 공조하여 자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D계획 참여 권유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문제로 인해 만일 한국이 미국의 MD계획에 참여할 경우, 대만 참여도 가시화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북한위협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로 경제적 요인이 중국경제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더욱 주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2)</sup> 중국이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지속케 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지원과 군사지원을 더욱 가중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설적인 영향력을 중국이 행사함으로써 대북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중국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이 중국의 대북 안보공약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구소련 붕괴시기부터 김일성의 사후에까지도 중국의 대

---

82) 맥나마라 교수는 중국, 일본, 한국간의 교역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들 국가들간에 Networking Capitalism이 형성되어 향후 동북아에서는 군사력 위주에서 군사력의 균형과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화 위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Dennis McNamara, "Security and Society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wo Years of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FES and the 5th Anniversary of the SNS, Kyungnam University, May 23~24, 2002.

북 경제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경원시 하는 등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한 바 있으며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완충론보다는 한반도 안정 유지가 자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이롭다는 점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간 중국정부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천명해 온 점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표명은 21세기에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대북 안보 조약을 공식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북한완충론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미국에 크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혹이 불식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미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지도부는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안보이익이 크게 상충되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 이전이라도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욱 편향되는 것을 원하며 특히 통일한국이 친중국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기를 원할 것이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고 한·미 방위조약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1세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북한을 완충지로 지속시키는 한, 중·미간의 장기적인 안보이익 갈등과 북한의 위협을 의식한 한국의 대미 외교는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원하는 자주 중립적인 한반도가 출현되기 위해서는 한·중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이헌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홍용표.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2. 논문류

- 소치형.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발표 논문, 1999.11.26).
- 유석렬. “남북한 군비통제의 배경, 특징, 전략.” 신정현 외 공저.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 윤덕민. “미국의 NMD 구상과 한반도” (한국정치학회, 2001.4.20).
-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방안” (21세기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9. 12. 7).

Bingwei, Tao.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from a Chinese Perspective.”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wo Years of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FES and the 5th Anniversary of the SNS, Kyungnam University, May 23~24, 2002).
- Huntly, Wade L. and Robert Brown. "Missile Defense & China." *Foreign Policy in Focus*, Vol. 6. No. 3 (2001. 1).
- Jisi, Wang,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Joint international seminar by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5.27).
- Kelly, James A. Kelly. "North-South Relations after the Summit" (CSIS-KINU Seoul Workshop, 2000.11.16).
- McNamara, Dennis. "Security and Society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wo Years of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FES and the 5th Anniversary of the SNS, Kyungnam University, May 23~24, 2002).
- Nam, Changhee and Bonhak Koo.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nd the Inter-Korean Security Relations."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nd Germany's Ostpolitik for Peace and Security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제45차 학술회의, 2001.5.17).
- Newhouse, John. "The Missile Defense Debate." *Foreign*

*Affairs*, Vol. 80, No. 4.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April 5, 2002.).

Roberts, Brad,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 Montaperto.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Schell, Jonathan. “The Folly of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ume 79, No. 5 (September/October 2000).

Shulong, Chu. “China and US-Korean Alliance”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10. 28~29).

Sigal, Leon V. “Beyond the Agreed Framework to a Missile Dea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10.15).

Tang, Shiping. “A Neutral Reunified Korea: A Chinese View.”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Fall/Winter, 1999)

Wedeman, Andrew. “Prospects for a Sino-American Transition War.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Zhao, Quansheng. "The Chinese Position on the Korea Four-Party Talk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10.15).

陸信源. "動蕩孕育調整 複雜因素增多: 1998年國際形勢回顧."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1999國際形勢」.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7.11.

### 3. 기타

「동아일보」.

「世界日報」.

「연합통신」.

「朝鮮日報」.

「중앙일보」.

*FBIS.*

*Financial Times.*

*Intenational Herald Tribune.*

*Korea Herald.*

*New York Times.*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大公報」.

『人民日報』.

『中國時報』.

『解放軍報』.

“China Condemns US Congressional Acts on Military Cooperation With Taiwan.” Xinhua (2002.5.13).

“China: PRC Outlines 5 Principles To Reduce Tension in Koreas.” *FBIS-CHI-99-022*.

“DPRK FM Spokesman on Need to Dismantle UNC for US Forces’ Withdrawal, Settlement of Korean Issue.” *FBIS-EAS-2002-0724*.

“Shen Guofang on Building New Security Concept,” *FBIS-CHI-1999-1014*.

“Title: AFP: PRC Foreign Ministry Releases Statement on NATO-Russia Accord.” *FBIS-CHI-2002-0530*.

“Title: Beijing: NATO, Russian ‘True Partnership’ Discussed.” *FBIS-CHI-2002-0528*.

“Title: PRC Condemns Congressional Acts Showing ‘Strengthening US-Taiwan Military Cooperation’.” *FBIS-CHI-2002-0513*.

“Title: Xinhua ‘News Analysis’: U.S., Russia Fail To Strike Deal On Missile Defense.” *FBIS-CHI-2001-1115*.

“DPRK Urges US, ROK To ‘Immediately Withdraw’ NLL Or Face Consequences.” *FBIS-EAS-2002-0803*.

“U.N. Command Proposes General-Level Talks with North Korea.” *FBIS-EAS-2002-0703*.

Xingbao, Chou.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hina” (통일원 정세분석실, 1996.5).

Zhi, Chen. “What’s True and False About the Word.” Xinhua (2002.5.28).